

월요광장

호남의 3절(傑)을 아는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리 호남 지역은 옛날 이래 충신(忠臣)·의사(義士)들의 연수(淵藪)였다” 200년 전 강진에 귀양 살던 다산 정약용이 했던 말이다. ‘연수란 연못과 숲이라는 뜻이니 물고기가 모여 있는 연못이자 짐승들이 모여 사는 숲속으로 충신·의사들이 때를 지어 살아가던 곳이라는 뜻이다. 다산은 또 말했다. “호남 사람들은 나라에 큰 난리가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분주히 힘쓴 것은 필연코 팔도에서 으뜸이었으니, 이 또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닌가?” 다산은 200년 전에 호남인들의 애국심과 의병 정신을 제대로 파악했다. 요즘 대통령이 극찬한 ‘광주정신’을 다산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임진·병자 등 국난에 죽음을 두려워하

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려다 장렬하게 순국한 의병장들을 기억하기는 쉽지만, 조선 초기에 의리와 지조를 지키느라 벼슬길을 차단당했던 호남의 세 호걸들인 ‘3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산·중종 시대의 술한 사화(士禍)에서 의리를 지키느라 희생당한 ‘호남 3절’은 바로 신재 최산두(崔山斗 : 1483~1536), 굴정 윤구(尹衢 : 1495~1542), 나암 유성춘(柳成春 : 1495~1522) 등 세 분이였다. 이 세 분은 모두 뛰어난 인물로 동시대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림·육당을 거쳐 호당(湖堂)에 들어간 인재들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뜻을 함께한 뒤 의리를 지키느라 낙척(落拓)되고 귀양살이에 들어가 불우한 삶을 마친 분들이었다. 최산두는 광양 출신으로 기묘사화 때 동북현으로 귀양 와 산림에 묻혀 지냈으나 훌륭한 인품과 높은 학식으로 세상에 알려져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낸 업적이 큰 분이였다. 특히 호남의 대학자들인 김인후·유희춘 등이 문하에서 배출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학문과 의리에 뛰어난 학자를 요즘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윤구는 해남 윤씨로 해남 출신이니 바

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다. 고산은 그 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윤구는 의리의 학자로 아는 사람이 적다. 홍문과 수찬에 오르고 호당에 들어가 온 나라에 이름을 떨쳤으나 기묘사화로 낙척되어 고향 생활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 윤구의 아들 손자들이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큰 벼슬에 올라 명망거리는 해남 윤씨였으나 정작 본인은 숨어 살았던 이유로 명성을 떨치지 못하고 말았다. 나암 유성춘은 우리가 잘 아는 미암 유희춘의 친형이다. 아버지 유계린(柳桂隣)은 금남 최부의 사위였으니 유성춘과 유희춘은 바로 금남의 외손자였다. 28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기묘명현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명성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조정랑을 역임하고 호당을 거쳐 장래가 보장된 인물이었지만 의리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하고 희생으로 끝났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듯 16세기 초 호남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3절’을 찬양하는데 오늘날에는 아무도 호남 3절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란 말인가.

지난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은 광화문의 촛불은 ‘광주정신’에서 발원했다고 하면서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광주정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요, 5·18 주인공들이 새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수백 년 전에 호남인들은 다른 어떤 지역 출신들에 앞서 탁월한 의리와 애국의 정열을 지니고 있었다. 을사사화 때 의리를 지키다가 함경도로 귀양가 끝내는 시약을 받고 절사한 금남 최부에서 유성춘·유희춘·윤구의 학맥이 이어져 왔다. 호남정신이자 광주정신은 바로 그런 연면한 역사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 “호남이 아니면 나라가 없다”라던 일란 때의 호남정신, 축창과 낫을 들고 일어섰던 동학혁명의 피어린 투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혼과 애국의 깃발, 4·19, 5·18의 숭고한 저항정신은 모두 그런 선열들의 의혼을 이어 오면서 저러난 투혼의 결정체였다. 모처럼 ‘호남정신’이 대접을 받으려는 조짐이 있는 오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하루속히 설립되어 전문 학문과 전통적인 사상을 제대로 연구하여, 그동안 문헌 의리정신과 의혼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법조칼럼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이수학 변호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법대로 하자’,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들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다툼에서도 나오는 말들이고,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다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처럼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그 ‘법’이나 ‘규정’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성격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앞에서 나오는 ‘법’이나 ‘규정’을 어떤 성문화된 내용으로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일사불란하고 공평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다툼이 있거나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기존의 ‘법과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법과 규정’대로 일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두 ‘법과 규정’대로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과 규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잣대인데 그 잣대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규정’이 정당하고 또 국가와 시민사회를 바로 구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문화된 법과 규정은 사회가 존속해 오면서 계속 있어왔고 또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 제정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반영되고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져온 철학적 고민, 도덕적 가치, 그리고 넓게 보면 일반적인 법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규정’을 어떤 성문화된 내용으로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일사불란하고 공평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점으로 생각하는 것

부족하기에 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두어 가지 문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에 가면 자주 듣는 ‘규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일처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 모두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일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규정대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오’할 때 우리는 한 번쯤 그 규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과 행정기관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나 법규라 하더라도 그것의 정당성이 모두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되고 통과된 실정법에 ‘이러하고 저러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그 유효를 달리한 것도 그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누군가의 고민과 투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자도 부당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소원을 통해 그 법 조항을 무효화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부당한 법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웠겠습니까? ‘법대로 하자’, ‘규정대로 하자’는 말은 그 ‘법과 규정’이 구속력 있는 법규이고 또 정당한 경우에만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투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오늘부터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법’대로 하면 그 법의 성격이 무엇이고 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에는 ‘법 자체에 대한 고민과 투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고

시골 면장의 작은 행복



박래근 함평군 월야면장

오사이 뉴스를 보면 장기 가뭄으로 짙 짙 갈라지는 논경지와 저수지 바닥을 보고 한숨만 내쉬는 농부님들의 한숨소리만 들린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비교적 잘 갖춰진 수리시설과 준비된 저수지 담수 덕분에 모내기를 수월하게 마쳤다. 다만,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은 계속된 가뭄 탓에 밭이 덜 든 상태로 수확하고 있다. 상반기에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는 5월 말경부터 6월 중순까지이다. 모내기 준비 작업인 물잡기와 논 고르기, 모심기 그리고 지난해 심어놓았던 밭작물을 거둬들이는 시기이다. 농번기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한 행정·

대민기관은 조금 여유가 있다. 농사에 바쁘다 보니 농민들이 특별한 일 아니면 면 소재지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골 면장’이 사무실만을 지키며 찾아오는 주민과 대화하고 민원행 정만을 처리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것은 본분이 아닐 터다. 그동안 대부분 ‘찾아오 는 민원’을 해결했지만 바쁜 시기에는 직접 영농현장을 돌며 민원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들판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뵈려 하니 빈 손으로 인사드리기에는 뜻밖에서 뭔가 ‘새참거리’를 가지고 방문해야겠다고 생각, 동료들과 상의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짓는다는 점을 감안, 아이스크림을 새참으로 정했다. 예전의 농촌 풍경을 돌이켜 본다. 모내기 는에 물을 대어 소가 써우레를 이끌고 “이라! 이라!” 하고 모심는 풍경이 전형적이다. 두레와 풍악이로 모를 심고 그 뒤에서는 모쟁이가 모심는 사람의 등위로 부족한 모를 획 던진다. 그 여파로 점병하고 논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 ‘아이

고 모쟁이 이논야 살살 던져라”고 웃는 소리 등 왓자지껄했다. 하지만 최근 농촌 풍경은 사뭇 다르다. 논 주인은 논둑을 정비하고 몇 대의 트랙터들만이 논 가운데를 채우고 돌아다닐 뿐이다. 모심을 땀 모를 나르는 아낙 사람과 앞·뒤와 옆 모심는 출만 바라보며 묵묵히 이앙기를 모는 사내 한 사람, 밭에 서는 나이 드신 노부부가 별다른 대화도 없이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을 뽑는 애처로운 모습뿐이다. 마음이 아리고 캔스레 눈물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 데 무슨 쉴 시간이 있고 새참이 있고 시원한 갈증을 풀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자식들은 객지에서 산업역군이니 판·검사니, 사장이니, 돈을 잘 번다느니 할 뿐.. “그래, 이제 면장이면민의 아들이지.” 아이스크림을 들고 마을을 보름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다녔다. 토·일 요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느다랗고 긴 논두렁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많은 밭두렁을 타면서 새까맣게 그들

린 구릿빛 어르신을 만났다. “어무이, 아버지 새참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은 일에만 몰두하시다가 짹 짹 놀라며 가무잡잡한 눈빛이 휘둥그레진 다. “아따! 우리 면장님이 뭘 일이당가? 뭘 일 있어?” “아니라우! 우리 어매, 아버지가 일하 싣게 아들이 새참 가져왔소!” “오매 80 평생에 면장이 새참 들고 오는 것 처음 보네.” 면 직원들의 ‘깜짝 방문’에 어르신들은 잠깐 틈을 내 허리를 펴고 곁을 내준다. 농사는 어떻게, 작황은 어떻게, 가뭄대책은 어떻게, 아랫동네는 어떻게, 동네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자식들은 어떻게... 순간이나마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에 스치는 행복을 바라보게 된다. 덩달아 우리 일행도 보람을 찾고 행복감을 맛본다. 세입 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하는 데 네 잎 클로버의 행운을 찾고자 하는가? 시골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여, 이 조그마한 보람과 행복을 같이, 함께 누리보지 않으 시러우?

社說

정치자금법 개정안 초고속 통과 ‘속 보인다’

과거엔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 열린 임시국회에서 수십여 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조 직법 등 11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비록 정부조직법은 처리하지 못했지만, 7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끝이 있어 있었던 3월 5일 본회의에서도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과거 이처럼 법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파행과 공천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공동된 숙원을 담은 법안이 임시천리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지난주 여야 간 다툼 없이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의 압도적 찬성 표로, 그것도 상임위 상정 이후 보름 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금지해 왔다. 이제 개정안 통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일한 법안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임시천리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알뜰함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국회가 파행하는 와중에 정당이 제 자신의 밭그릇을 쟁기는 법안만 합의하는 등 때문이다. 일자리 추 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민선6기 3년 성과 있었지만 과제도 수두룩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이달 말로 정확히 3년이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 동안 지역 현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광주의 경우 시민시장단계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시청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5·18과 광주정신을 바로 세웠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미래 먹거리 기반을 다진 것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은 476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하는 등 기업 유치와 일자리에서 성과를 냈다. 빛가람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고 ‘술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남도 문예 르네상스’ 등 숲과 섬, 남도 문화를 브랜드 사

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민주노동자라는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전남은 이낙연 총리 차출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추진력 약화 극복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최대 과제는 광주·전남의 공동현안을 어떻게 풀이 가느냐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현안을 상생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민간현안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 근공항 이전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에너지밸리와 한전 공대 등 미래 먹거리를 놓고 서로 원원할 수 있는 묘법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은 1년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셈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동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야 한다. 그래야 1년 후 최종 평가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최초로 블라인드 오디션(blind audition, 장막 오디션)이라는 단일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사위원들이 편견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장막으로 가려 놓은 채, 연주를 듣는 제도였다. 이날 한 지원자의 실력이 월등했는데 장막을 걷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본인이었다고 한다.

20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세계 클래식계는 서양의 전 유물이었고, 그것도 남성들의 무대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블라인드 오디션을 도입한 것 해, 바이올리니스트 합격자 네 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장막 테스트는 남자의 악기, 심지어 군인의 악기로 여겨졌던 금관악기에 대한 편견도 깨뜨렸다. 1980년 여름, ‘뮌헨 필하모니’도 이 오디션을 실시했다. 지원자 중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트롬본 연주자에 33명이 지원했다. 이중 ‘아비 코난트’는 16번째로 연주했다. 그의 연주에 반한 심사위원들은 나머지 17명의 대기자들

을 테스트 없이 돌려보냈다. 그 후 장막을 걷은 심사위원들의 놀라움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트롬본은 결코 여자가 다룰 수 없는 악기라는, 그때까지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훌륭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오보에 같은 여성적인 악기가 아닌,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이상한 여자로 치부돼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오디션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력서에 차별적 요소는 기재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 있음은 대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 출신 대다수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서류 전형에서 배제되곤 한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편견과 차별을 깬 ‘블라인드 오디션’의 사고방식이 뿌리내렸으면 한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